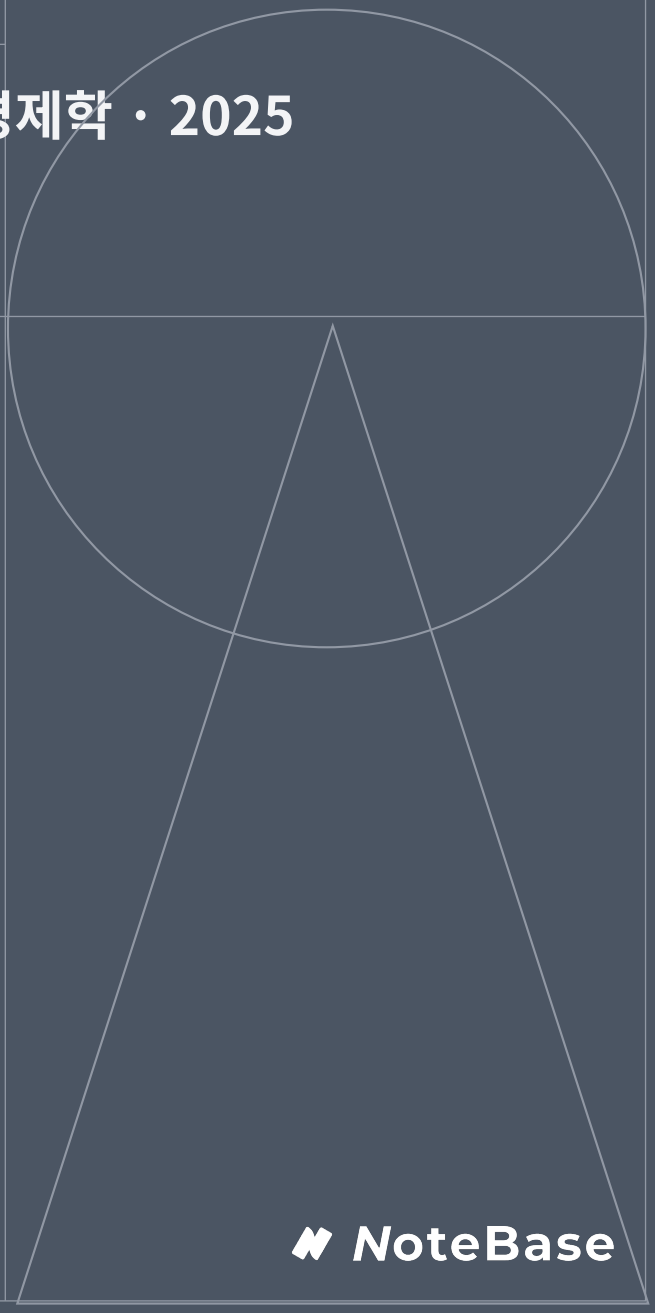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경제학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경제학 · 2025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경제학 · 2025

문 1. 수요의 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격 변화시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② 열등재의 경우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에 있어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항상 크다.

③ 대체효과는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반면에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다.

④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만을 나타낸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열등재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 방향이지만 대체효과가 항상 우세하지는 않다. **소득효과의 절대크기가 더 큰 기펜재**에서는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량이 감소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재화 자체의 가격 변화에 따른 전체 수요량 변화인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싸지거나 비싸진 데 대한 반응과 실질구매력이 달라진 데 대한 반응을 구분하는 것이다.

② X. 열등재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이 반대이지만, 대체효과가 항상 더 큰 것은 아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는 수요량을 늘리고,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는 열등재 수요량을 줄인다. 이때 **소득효과의 절대크기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기펜재**가 되어 가격 하락에도 수요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모든 열등재가 기펜재인 것은 아니며,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중요하다.

③ O. 대체효과는 다른 재화에 비해 해당 재화가 상대적으로 싸지거나 비싸지는 데 따른 변화이다. 소득효과는 명목소득이 같아도 가격 변동으로 구매 가능한 양, 즉 **실질소득**이 달라지는 데 따른 변화이다.

④ O. 보상수요곡선은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의 효용이 일정하도록 소득을 보상하여 구한 수요곡선이다. 실질구매력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를 제거하므로 **대체효과에 의한 수요량 변화**를 나타낸다.

NoteBase

문 2. 사적재(private goods)인 X재 시장에는 개별 수요함수가 $P = 10 - 40Q$인 소비자가 20명 존재하고, 개별 공급함수가 $P = 4 + 80Q$인 공급자가 40명 존재한다. X재의 시장균형가격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① 5

② 6

③ 7

④ 8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적재 시장에서는 **같은 가격의 개별 수량을 수평으로 합산**한다. 시장수요 $P = 10 - 2Q$와 시장공급 $P = 4 + 2Q$를 같게 놓으면 균형가격은 7이다.

계산 과정

사적재의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은 같은 가격에서 각 경제주체의 수량을 더하는 수평합으로 구한다. 개별 역수요·역공급의 가격을 인원수만큼 더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 수량은 q, 시장 전체 수량은 Q로 구별한다.

개별 수요함수 $P = 10 - 40q$를 수량에 대해 풀면 $q_d = \frac{10 - P}{40}$이다. 소비자가 20명이므로 $Q_d = 20 \times \frac{10 - P}{40} = \frac{10 - P}{2}$이고, 역시장수요는 $P = 10 - 2Q_d$이다.

개별 공급함수 $P = 4 + 80q$에서 $q_s = \frac{P - 4}{80}$이다. 공급자가 40명이므로 $Q_s = 40 \times \frac{P - 4}{80} = \frac{P - 4}{2}$이고, 역시장공급은 $P = 4 + 2Q_s$이다.

균형에서는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이 같으므로 $\frac{10 - P}{2} = \frac{P - 4}{2}$이다. 이를 풀면 $10 - P = P - 4$, $2P = 14$, $P = 7$이다.

이 가격에서 시장균형수량은 $Q = \frac{10 - 7}{2} = 1.5$이다. 가격 7은 수요의 절편 10보다 낮고 공급의 절편 4보다 높아 각 개별 수요·공급량도 양수이므로 계산에 사용한 구간과 일치한다.

따라서 시장균형가격은 ③ 7이다.

NoteBase

문 3.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급곡선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인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이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에서 필수재는 사치재에 비해 덜 탄력적이다.

③ 월간 지하철 탑승수요의 요금탄력성은 연간 지하철 탑승수요의 요금탄력성에 비해 덜 탄력적이다.

④ 보완관계에 있는 두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④이다. **보완재의 교차탄력성은 음수**이다.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함께 소비하는 다른 재화의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원점을 통과하는 우상향 직선 공급곡선을 $Q_s = kP, k > 0$으로 나타내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varepsilon_s = (dQ_s/dP)(P/Q_s) = kP/(kP) = 1$이다. 이는 가격과 수량이 양수인 점에서 성립하며, 가격과 수량이 모두 0인 원점에서는 비율식 자체가 정의되지 않는다.

② O: 일반적으로 필수재는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크게 줄이기 어려워 사치재보다 수요가 덜 탄력적이다. 여기서 탄력성의 크기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이는 다른 조건이 비슷할 때의 일반적 경향이다.

③ O: 통상 소비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체 교통수단을 찾거나 거주·통근 방식을 조정할 여지가 커진다. 따라서 월간처럼 단기에 관찰하는 수요는 연간처럼 조정 기간이 긴 수요보다 요금 변화에 덜 탄력적인 것으로 본다.

④ X: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varepsilon_{xy} = (\partial Q_x/\partial P_y)(P_y/Q_x)$이다. 보완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함께 사용하는 다른 재화의 수요도 감소하므로 **교차탄력성이 0보다 작다**. 양의 교차탄력성은 대체관계를 뜻하며, 보완재의 탄력성을 0과 1 사이로 한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NoteBase

문 4.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느 재화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
$Q^D = 5 - P$
$Q^S = -1 + P$
시장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시한다.)

① $\frac{1}{3}$
② $\frac{1}{2}$
③ $\frac{2}{3}$
④ $\frac{3}{2}$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균형가격은 3, 균형거래량은 2이다. 수요곡선 기울기에 **가격을 수량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절댓값을 취하면 가격탄력성은 3/2이다.

계산 과정

시장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므로 $5 - P = -1 + P$이다. 이를 풀면 $2P = 6$에서 균형가격은 P = 3이고, 균형거래량은 $Q = 5 - 3 = 2$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이다. 한 점에서의 탄력성을 절댓값으로 나타내면 $\varepsilon_D = |\frac{dQ^D}{dP}\frac{P}{Q^D}|$이다. 수요곡선 $Q^D = 5 - P$에서 $\frac{dQ^D}{dP} = -1$이며, 여기에 **균형점의 가격과 수요량 비율**을 곱해야 한다.

따라서 균형점에서 $\varepsilon_D = |-1 \times \frac{3}{2}| = \frac{3}{2}$이다.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 1을 탄력성으로 그대로 쓰거나 가격·수량 비율을 뒤집지 않는다. 구한 탄력성은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5. 정부가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는 경제적 순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② 소비자와 생산자간 조세로 인한 부담은 그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는가와 무관하다.

③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작다.

④ 세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 모두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세율 인상은 거래를 위축시키므로 **조세수입을 항상 늘리지는 않는다.** 세액이 늘어나는 효과보다 과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면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시장실패가 없는 경쟁시장에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의 지불가격과 생산자의 수취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겨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 중 정부 조세수입으로 이전되지 않고 사라지는 부분이 경제적 순손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적인 재화세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다만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세금처럼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까지 모든 조세에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같은 세금이라면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든 생산자에게 지우든 시장가격이 조정되어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나뉜다. 경제적 부담의 귀착은 **법적 납세자가 아니라 수요·공급의 상대적인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③ O: 수요가 우하향할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공급자는 세후 수취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공급량을 더 쉽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공급자는 세금을 더 많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중은 작아진다. 상대적으로 덜 탄력적인 쪽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④ X: 세율이 높아지면 거래가 더 위축되어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지만, **조세수입이 언제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액과 과세 거래량을 곱한 값이므로, 세액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보다 거래량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가 커지면 오히려 줄어든다. 세율과 조세수입이 일정 구간 이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래퍼곡선의 핵심이다.

NoteBase

문 6. 양(+)의 효용을 주는 두 재화(X재와 Y재)의 소비에 있어 무차별곡선 관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무차별곡선이 교차하는 경우 선호체계의 연속성에 위배된다.

② 원점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무차별곡선은 보다 큰 효용수준을 나타낸다.

③ X재와 Y재가 완전보완관계이면 효용극대화 소비점에서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비율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X재와 Y재가 완전대체관계이면 예산선 위의 모든 점에서 효용극대화가 달성될 수도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무차별곡선의 비교차성은 **선호의 이행성**과 더 많은 재화를 선호한다는 조건에서 나온다. 교차를 허용하면 서로 무차별이어야 하는 두 조합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선호되는 모순이 생기며, 이는 연속성에 관한 설명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이 교차할 수 없는 근거는 주로 **선호의 이행성**과 더 많은 재화를 선호한다는 조건이다. 두 곡선의 교점을 A, 각 곡선의 다른 점을 B와 C라 하면 B와 A, A와 C가 각각 무차별이므로 이행성에 따라 B와 C도 무차별이어야 한다. 그런데 B와 C 중 한 점이 다른 점보다 더 많은 재화를 갖도록 고를 수 있어 모순이 생긴다. 이를 연속성 위반으로 설명한 것은 잘못이다.

② O. 두 재화가 모두 소비를 늘릴 때 효용을 높이는 재화이면, 원점에서 **북동쪽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무차별곡선이 더 큰 효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원점에서 멀다'는 표현은 단순한 직선거리 비교가 아니라 더 높은 무차별곡선에 놓인다는 의미이다.

③ O. 완전보완재의 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며, 효용극대화는 보통 두 재화를 정해진 비율로 소비하는 꺾인 점에서 이루어진다. 그 점에서는 **한계대체율이 하나의 기울기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매끄러운 내부해에서 쓰는 한계대체율과 가격비율의 일치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

④ O.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직선이다. 예를 들어 $U = aX + bY$일 때 $a/b = P_X/P_Y$이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 **예산선 위의 모든 소비조합**이 같은 최대효용을 준다. 두 기울기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한 재화에 지출을 집중하는 모서리해가 된다.

NoteBase

문 7. X재와 Y재만 이용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y)=x^{\frac{1}{2}}y^{\frac{1}{2}}$이다. 이 소비자의 소득은 120이고, X재 가격이 2, Y재 가격이 4라고 할 때 X재와 Y재의 최적 소비량은? (단, x와 y는 각각 X재와 Y재 소비량이다.)

① x: 20, y: 20

② x: 30, y: 15

③ x: 40, y: 10

④ x: 50, y: 2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두 지수가 같은 코브더글러스 효용에서는 **두 재화에 소득을 절반씩 지출**한다. 각 지출액 60을 가격으로 나누면 X재 30, Y재 15를 소비한다.

계산 과정

효용함수는 두 재화에 대해 증가하므로 최적점에서 소득을 모두 지출한다. 예산제약은 $2x+4y=120$이다. 두 재화의 지수가 모두 양수인 코브더글러스 효용이므로 양의 소비량을 갖는 내부해를 구한다.

내부 최적점에서는 한계대체율이 가격비율과 같아야 한다. 한계효용의 비는 $\frac{MU_x}{MU_y}=\frac{y}{x}$이고, 가격비율은 $\frac{P_x}{P_y}=\frac{2}{4}=\frac{1}{2}$이다. 따라서 $\frac{y}{x}=\frac{1}{2}$, 즉 $x=2y$이다.

이를 예산제약에 대입하면 $2(2y)+4y=120$, $8y=120$이므로 $y=15$이고 $x=30$이다.

지수가 같으므로 각 재화에 소득의 절반인 60을 지출한다는 성질로도 확인할 수 있다. $x=\frac{60}{2}=30$, $y=\frac{60}{4}=15$이다. 같은 비율의 지출을 한다는 것이 같은 수량을 소비한다는 뜻은 아니다.

계산한 묶음은 2×30+4×15=120으로 예산을 정확히 충족한다. 따라서 최적 소비량은 X재 30, Y재 15이며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5L^{0.4}K^{0.6}$이다. 기업 A의 노동량과 자본량이 각각 $L = 1$과 $K = 1$일 때, 자본의 한계생산물(MP_K)과 자본의 평균생산물(AP_K)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① MP_K: 1, AP_K: 1

② MP_K: 2, AP_K: 4

③ MP_K: 3, AP_K: 5

④ MP_K: 5, AP_K: 3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③이다. 자본으로 편미분하면 $MP_K = 3L^{0.4}K^{-0.4}$, 자본량으로 나누면 $AP_K = 5L^{0.4}K^{-0.4}$이다. $L = K = 1$에서 각각 **3과 5**이다.

계산 과정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노동량을 고정한 채 자본량을 미소하게 늘릴 때의 생산량 변화율**이다. 생산함수 $Q = 5L^{0.4}K^{0.6}$을 K에 대해 편미분하면 $MP_K = \partial Q/\partial K = 5 \times 0.6L^{0.4}K^{-0.4} = 3L^{0.4}K^{-0.4}$이다.

$L = 1, K = 1$을 대입하면 $MP_K = 3 \times 1^{0.4} \times 1^{-0.4} = 3$이다. 노동의 지수 0.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 대상인 자본의 지수 0.6을 곱해야 한다.

자본의 평균생산물은 총생산량을 자본량으로 나눈 값이다. $AP_K = Q/K = 5L^{0.4}K^{-0.4}$이므로 같은 투입량에서 $AP_K = 5$이다. 직접 총생산량 $Q = 5$를 구해 자본량 1로 나누어도 같다.

따라서 $MP_K = 3,\ AP_K = 5$로 정답은 ③이다. ④는 한계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의 값을 뒤바꿨고, ①·②의 값도 각각 편미분 및 총생산량을 자본량으로 나눈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생산함수에서는 $MP_K = 0.6AP_K$라는 관계로도 검산할 수 있다.

NoteBase

문 9.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 = 2L + 4K$이다. L의 가격이 2, K의 가격이 5일 때, $Q = 200$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두 생산요소의 투입량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① L: 0, K: 50

② L: 50, K: 25

③ L: 80, K: 10

④ L: 100, K: 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비용 한 단위당 생산량은 노동이 1, 자본이 0.8이므로 **노동만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생산량 200을 달성하려면 노동 100단위, 자본 0단위를 투입한다.

계산 과정

생산함수 $Q = 2L + 4K$에서 노동과 자본은 **완전대체 관계**이다. 노동 한 단위는 생산량 2를, 자본 한 단위는 생산량 4를 늘리므로 투입요소의 가격만이 아니라 비용 한 단위당 생산량을 비교해야 한다.

노동의 비용 한 단위당 생산량은 $MP_L/w = 2/2 = 1$, 자본은 $MP_K/r = 4/5 = 0.8$이다. 따라서 **노동이 자본보다 비용효율적**이며, 별도의 투입제약이 없으므로 노동만 사용하는 모서리해가 비용을 최소화한다.

자본을 $K = 0$으로 놓으면 목표 생산량 조건은 $2L = 200$이므로 $L = 100$이다. 이때 비용은 $C = 2L + 5K = 200$이다.

이를 직접 확인하면 생산량 조건에서 $L = 100 - 2K$이고, 비용은 $C = 2(100 - 2K) + 5K = 200 + K$이다. 자본을 더 사용할수록 같은 생산량을 만드는 비용이 늘어나므로 최소비용 투입량은 **L=100, K=0**이며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총비용이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생산량이 q^0일 때 최저가 되며 이후에는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① 생산량이 q^0보다 큰 경우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크다.

②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생산량에서 한계비용은 평균가변비용과 같거나 작다.

③ 생산량이 q^0일 때의 평균총비용보다 시장균형가격이 낮다면, 이 기업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단기에도 시장에서 퇴출한다.

④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은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가변비용곡선은 우하향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이면 손실이 발생해도 **가변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동안** 단기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
시장가격이 최소 평균총비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퇴출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평균총비용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추가 한 단위의 비용인 한계비용이 기존 평균총비용보다 크다. 실제로 $\frac{dATC}{dq} = \frac{MC - ATC}{q}$이므로, q q^0에서 평균총비용이 상승한다는 조건은 MC ATC를 뜻한다.

② O: 가격수용 기업이 가격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는 산출량을 검토할 때,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수입으로 가변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므로 조업을 중단한다. 이때 P=MC AVC이며, 조업중단점의 경계에서는 $P = MC = AVC$이다. 다만 경계에서는 생산과 중단의 손익이 같아 무차별하므로, 등호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③ X: 시장가격이 최소 평균총비용보다 낮으면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손실 발생만으로 단기에 퇴출하지는 않는다**.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이면 생산하지 않아도 부담하므로, 가격이 평균가변비용 이상인 산출량에서는 생산으로 가변비용을 충당하고 고정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단기 조업 여부는 평균총비용이 아니라 가변비용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③이 옳지 않다.

④ O: $\frac{dAVC}{dq} = \frac{MC - AVC}{q}$이다. 따라서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생산량을 늘릴수록 평균가변비용이 감소한다. 추가 생산분의 비용이 기존 평균보다 낮아 **평균을 끌어내리는** 관계이다.

NoteBase

문 11.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 = \min[2L, 3K]$이다. 노동의 단위당 임금이 20, 자본의 단위당 임대료가 30일 때, 이 기업의 비용함수는?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① $C = 20Q$

② $C = 30Q$

③ $C = 40Q$

④ $C = 50Q$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고정비율 생산에서는 **두 생산능력을 일치시키는 투입**이 비용을 최소화한다. $L = \frac{Q}{2}$, $K = \frac{Q}{3}$이므로 비용은 $10Q + 10Q = 20Q$이다.

계산 과정

생산함수 $Q = \min[2L, 3K]$는 노동과 자본이 고정된 비율로 결합되는 레온티에프형이다. 생산량 Q를 달성하려면 $2L \geq Q$와 $3K \geq Q$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두 투입요소의 가격이 모두 양수이므로 필요한 양을 초과해 투입하면 비용만 늘어난다. 따라서 비용최소화에서는 $2L = 3K = Q$가 성립하여 조건부 요소수요는 $L = \frac{Q}{2}$, $K = \frac{Q}{3}$이다.

노동과 자본의 총비용은 $C = 20L + 30K$이다. 최소 투입량을 대입하면
$C(Q) = 20 \times \frac{Q}{2} + 30 \times \frac{Q}{3} = 10Q + 10Q = 20Q$이다.

예를 들어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노동은 $\frac{1}{2}$, 자본은 $\frac{1}{3}$만큼 필요하고 각각 비용 10이 발생한다. 생산함수의 계수 2와 3을 투입량 자체로 사용하거나, 두 요소 중 하나만 골라 사용하는 것은 이 생산기술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함수는 $C = 20Q$로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평균수입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한다.

②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 중 평균가변비용곡선 위쪽에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③ 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0의 이윤을 얻는다.

④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크고 평균총비용보다 작은 경우 단기적으로 생산을 중단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으면 판매수입으로 가변비용을 충당하고 매몰된 고정비용의 일부도 회수한다. 따라서 평균총비용보다 가격이 낮아 손실이 나더라도 **단기에는 생산을 계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평균수입과 한계수입이 모두 가격과 같다. 따라서 생산을 하는 경우 이윤극대화의 한계수입·한계비용 일치 조건은 $P = AR = MR = MC$가 된다. 통상적으로 한계비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생산중단보다 유리한 생산량을 선택한다.

② O: 단기에는 생산을 중단해도 매몰된 고정비용을 피할 수 없으므로, 생산 여부는 판매수입으로 가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단기 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의 최솟값 이상에 있는 한계비용곡선의 상승 부분**이다. 가격이 그 최솟값보다 낮으면 생산량은 0이고,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중단 사이에 무차별하다.

③ O: 단기에는 기업 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시장가격에 따라 양의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장기에는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이루어져 양의 이윤은 신규 진입을, 손실은 퇴출을 유발한다. 통상적인 장기 경쟁균형에서는 가격이 평균총비용의 최솟값과 같아져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이는 기회비용에 포함된 정상이윤까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으므로 제시된 조건은 $AVC < P < ATC$이다. 총비용을 모두 회수하지는 못하지만 가변비용을 충당하고 고정비용의 일부도 회수하므로 **단기에는 생산을 계속하는 편이 손실이 작다.** 생산중단 시에는 고정비용 전액을 손실로 부담한다.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기준은 가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은지가 아니라 평균가변비용의 최솟값보다 낮은지이다.

NoteBase

문 13.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개별기업의 장기 총비용함수는 $LTC(q_i) = 50q_i - q_i^2 + \frac{1}{20}q_i^3$으로 동일하다. 개별기업의 장기 총비용함수는 다른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 장기 균형가격은? (단, q_i는 기업 i의 생산량이다.)

① 30

② 35

③ 40

④ 45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④이다. 장기균형가격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솟값이다. $LAC = 50 - q + q^2/20$은 $q = 10$에서 최소이며, 그 값은 **45**이다.

계산 과정

완전경쟁의 장기균형에서는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로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따라서 활동 중인 기업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생산하며 $P = LAC = LMC$가 성립한다. 다른 기업의 진입·퇴출이 비용함수를 바꾸지 않으므로 주어진 함수로 이 최저점을 구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량을 q로 줄여 쓰면, $q > 0$에서 장기평균비용은 $LAC(q) = LTC(q)/q = 50 - q + q^2/20$이다. 총비용 자체의 최솟값이 아니라 생산량 한 단위당 비용의 최솟값을 구해야 한다.

$dLAC/dq = -1 + q/10 = 0$을 풀면 $q = 10$이다. $d^2LAC/dq^2 = 1/10 > 0$이므로 이 지점은 최저점이다.

장기균형가격은 $P = LAC(10) = 50 - 10 + 100/20 = 45$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장기한계비용 $LMC(q) = 50 - 2q + 3q^2/20$에 10을 대입해도 $50 - 20 + 15 = 45$로 일치한다.

평균비용을 완전제곱으로 정리하면 $LAC(q) = 45 + (q - 10)^2/20$이므로 어떤 양의 생산량에서도 45보다 낮아질 수 없다. 따라서 ①의 30, ②의 35, ③의 40에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활동 기업이 존재하는 장기균형가격이 될 수 없다.

NoteBase

문 14. 독점시장에서 시장수요곡선은 $Q = 120 - 2P$이다. 독점기업의 비용함수가 $C = 100 + Q^2$일 때,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① 15

② 20

③ 25

④ 3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역수요함수에서 구한 한계수입은 $60 - Q$, 한계비용은 $2Q$이다. 두 값을 같게 놓으면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20**이다.

계산 과정

수요식 $Q = 120 - 2P$를 가격에 대해 정리하면 역수요함수는 $P = 60 - \frac{Q}{2}$이다. 독점기업은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므로 가격 자체가 아니라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비교한다.

총수입은 $TR = PQ = 60Q - \frac{Q^2}{2}$이고, 이를 생산량으로 미분한 한계수입은 $MR = 60 - Q$이다. 비용함수 $C = 100 + Q^2$의 한계비용은 $MC = 2Q$이다. 고정비용 100은 미분하면 0이므로 한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윤극대화 조건 $MR = MC$를 적용하면 $60 - Q = 2Q$, 즉 $3Q = 60$이므로 $Q = 20$이다. 이윤함수는 $\pi = 60Q - \frac{3}{2}Q^2 - 100$이고 이계도함수가 -3이므로 이 지점에서 최대가 된다.

따라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20**으로 ②와 일치한다. 이때 가격은 50, 총수입은 1,000, 총비용은 500이므로 이윤은 500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중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다.

② 어느 한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이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 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장기 균형에서 수요곡선과 평균총비용곡선이 접하기 때문에 이윤은 0이 된다.

④ 기업들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초과 생산설비를 유지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독점적 경쟁기업도 **단기에는 손실을 보면서 균형에 머물 수 있다**.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으면 생산을 계속해 고정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같으면 생산과 조업중단의 손실이 같다. 장기 퇴출과 단기 균형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독점적 경쟁시장은 제품 차별화와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함께 존재하는 시장이다. 개별 기업은 주어진 수요 아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지만, 단기와 장기는 진입·퇴출 및 비용 조정 가능성이 다르다.

① O: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한 기업의 제품은 다른 기업의 제품과 완전대체재가 아니다.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줄지만 모든 고객을 즉시 잃지는 않으므로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② X: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도 단기 균형일 수 있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가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고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으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조업중단보다 손실을 줄인다. 가격이 평균가변비용과 같으면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므로 생산과 조업중단의 손실이 같다. 장기에 손실이 지속되면 퇴출 유인이 생기지만 이를 이유로 현재의 단기 균형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③ O: 이윤이 있으면 진입, 손실이 있으면 퇴출이 일어나 장기 균형에서는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이 평균총비용곡선에 접한다. 이때 가격과 평균총비용이 같아 경제적 이윤이 0이다. 정상 이윤은 비용에 포함되므로 회계상 이익까지 반드시 0이라는 뜻은 아니다.

④ O: 표준적인 장기 균형에서 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생산량을 선택하며, 이 생산량은 평균총비용을 최소로 하는 생산량보다 작다. 이 차이를 초과설비라고 한다. 선지의 표현은 이윤극대화 선택의 결과 초과설비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단순히 쓸모없는 설비를 추가 구매하면 이윤이 증가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6. 기업 A와 B는 '가격인하'와 '가격인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기업이 동시에 한 번만 선택하는 게임의 보수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보수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기업 A의 보수이고, 두 번째 숫자는 기업 B의 보수이다.)

		기업 B	
		가격인하	가격인상
기업 A	가격인하	$(5,\ 5)$	$(4,\ 0)$
	가격인상	$(0,\ 7)$	$(6,\ 6)$

① 두 기업 모두에게 우월전략이 존재한다.

② 1개의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③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④ 두 기업 모두 '가격인상'을 선택하는 담합이 가능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②이다. B의 우월전략은 가격인하이고 이에 대한 A의 최적반응도 가격인하이다. 따라서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가격인하, 가격인하) 하나**이며 보수는 (5, 5)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A는 B가 가격을 내리면 인하의 보수 5가 인상의 보수 0보다 높고, B가 가격을 올리면 인상의 보수 6이 인하의 보수 4보다 높다. 따라서 A의 최적 선택은 B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 우월전략이 없다. 반면 B는 A가 인하할 때 5 > 0, 인상할 때 7 > 6이므로 **가격인하가 엄격한 우월전략**이다.

② O: 내쉬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선택이 상대방 선택에 대한 최적반응이다. B는 항상 인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A의 최적반응도 인하이므로 **(가격인하, 가격인하)**가 유일한 순수전략 내쉬균형이다. 보수는 (5, 5)이며 정답은 ②이다.

③ X: 균형 보수 (5, 5)와 비교하면 두 기업 모두 가격을 올릴 때의 (6, 6)은 양쪽 보수를 모두 높인다. 따라서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 개인적으로 일탈할 유인이 없는 결과와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는 같지 않을 수 있다.

④ X: 두 기업이 모두 인상하기로 합의하더라도 A가 인상하는 동안 B는 인하로 바꾸어 보수를 6에서 7로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약속을 강제하는 장치나 반복에 따른 제재가 없는 이 일회 게임에서는 두 기업의 인상을 자발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여기서 담합이 어렵다는 것은 (인상, 인상)이라는 조합 자체가 선택지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합의가 안정적인 균형이 아니라는 뜻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중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발생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② 여가가 열등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③ 여가가 정상재이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④ 여가가 열등재이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임금 상승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지만, 여가가 정상재일 때의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인다.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서** 임금이 올라도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핵심 풀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은 임금이 오를 때 낮은 임금 구간에서는 노동공급이 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오히려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형태이다. 가용시간을 노동과 여가에 나누므로 여가가 늘면 노동시간은 줄어든다.

임금 상승은 여가 한 시간을 선택할 때 포기하는 소득을 늘린다. 즉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져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려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동시에 임금 상승은 같은 노동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높인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여가를 더 원하므로,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소득효과의 크기가 대체효과보다 큰 구간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대체효과가 더 크면 임금 상승에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여가가 열등재라면 소득효과도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이므로 두 효과가 후방굴절을 만드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방굴절의 조건은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것**이며,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부정적 외부효과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방법 중 하나는 교정적 조세이다.

②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 스스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③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존재한다면 사적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다.

④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주체와 이로부터 피해를 입는 주체간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이들 간 협상의 결과는 상이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코즈 정리의 거래비용 없는 협상 모형에서는 최초 재산권의 배분과 관계없이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한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보상금과 소득분배**이며, 이를 실물 자원배분의 차이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교정적 조세인 피구세는 외부 피해를 유발하는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여 그 사회적 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한다. 오염량 등을 직접 명령하는 규제와 달리, 주체가 세금과 감축비용을 비교하여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므로 **가격 유인을 이용하는 시장기반 정책**에 해당한다.

② O: 코즈 정리에 따르면 재산권이 명확하고 협상·계약·이행 등에 드는 거래비용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외부 피해를 줄이는 편익과 감축비용을 비교하면서 추가 협상 이익이 없어지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한다.

③ O: 현실에서는 협상 상대를 찾고 정보를 얻는 비용, 합의를 이루고 이행을 감시하는 비용 등이 발생한다. 특히 당사자가 많거나 거래비용이 협상으로 얻을 이익보다 크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적 해결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④ X: 코즈 정리의 통상적인 거래비용 없는 협상 모형에서 소득효과가 자원배분을 바꾸지 않는다면, 최초 재산권이 어느 쪽에 주어져도 협상은 동일한 효율적 활동 수준에 도달한다. 여기서 같다는 것은 **오염량·생산량 등의 실물 자원배분**이며, 보상금의 지급 방향과 당사자들의 소득분배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다. 가해자가 권리를 가지면 피해자가 감축 대가를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권리를 가지면 가해자가 활동 허용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 배분에 따른 분배 차이와 효율적 자원배분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중 *CPI*와 *GDP*디플레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GDP*디플레이터는 당해 연도의 가격을 적용한 명목 *GDP*를 기준연도의 가격을 적용한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다.

② *CPI*는 일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표준화된 묶음에 대한 비교연도의 구입비용을 기준연도의 구입비용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다.

③ *GDP*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 품목들이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CPI*와 다르다.

④ *CPI* 측정에 포함되는 품목의 품질 개선은 *CPI*에 반영되지 못하나 품목간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비에서의 대체는 *CPI*에 반영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고정된 구매 묶음을 사용하는 CPI는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더 저렴한 재화로 바꾸는 **대체행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실제 생활비 상승을 과대평가하는 대체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문제의 고정 기준연도 방식에서는 같은 당해 생산량을 당해 가격과 기준연도 가격으로 각각 평가하여 전반적인 가격수준을 비교한다.

② O. 기본적인 고정바스켓 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서비스의 수량을 고정하고, 그 묶음을 비교연도와 기준연도에 각각 사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한다. 즉 **비교연도 구입비용기준연도 구입비용×100**으로 계산한다.

③ O. GDP디플레이터는 국내 생산에 따른 GDP에 포함되는 최종 재화·서비스를 포괄하며, 생산 구성과 수량이 달라지면 가격을 반영하는 비중도 달라진다. CPI는 소비자의 구매 묶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범위와 가중치가 다르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중간재를 중복해서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GDP에 포함되는 국내 생산**의 범위를 가리킨다.

④ X. 고정바스켓 CPI는 상대가격이 오른 품목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품목을 더 소비하는 **소비자 대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생활비 상승을 과대평가하는 대체편의가 생길 수 있다. 품질 개선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우면 품질변화편의가 생긴다. 이 문제는 고정바스켓 지수의 한계를 묻는 것으로, 품질 개선의 측정 어려움과 달리 대체는 반영된다는 구분이 잘못이다.

NoteBase

문 20. 본원통화(monetary b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시중으로 흘러나온 모든 민간보유현금과 예금은행 지급준비금의 합계이다.

②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통화성자산으로 고성능화폐(high-powered money)라고도 한다.

③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에서 예금창조의 토대가 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본원통화는 보유자에게는 자산이지만 발행자인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는 통화성 부채**이다.
‘고성능화폐’라는 별칭은 맞고 ‘중앙은행의 자산’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해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기초적인 화폐로,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구성된다. 화폐를 발행한 중앙은행의 관점과 화폐를 보유한 민간·은행의 관점을 구별해야 한다.

① O: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예금은행 지급준비금의 합이다. 지급준비금에는 은행이 보유한 시재금과 중앙은행에 예치한 준비금이 포함된다. 은행 금고의 현금은 민간보유현금과 중복해 세지 않는다.

② X: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통화성 자산이 아니라 통화성 부채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와 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부채 측에 기록된다. 고성능화폐라는 이름은 예금통화 확대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가리키므로 그 부분은 옳다.

③ O: 중앙은행은 자산 매매나 은행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해 본원통화의 규모를 변화시켜 통화량과 금융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은행의 대출·준비금 보유와 민간의 현금·예금 선택도 작용하므로 본원통화 증가가 항상 일정한 비율의 통화량 증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O: 본원통화 중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예금 인출과 은행 간 결제를 뒷받침하여 예금통화 창출의 토대가 된다. 이는 기초적인 통화승수 설명에서 본원통화를 고성능화폐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실제 예금창조는 대출 수요, 은행의 건전성·유동성 조건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NoteBase

문 21. 법정지급준비율이 10%이고 초과지급준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용승수(credit multiplier)는 얼마인가?

① 1

② 2

③ 5

④ 1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④이다. 단순 예금창조 모형의 신용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이므로 $1/0.1 = 10$이다.

계산 과정

단순 예금창조 모형에서 신용승수는 지급준비금 증가에 대한 총예금 증가의 배율이다. 현금이 은행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대출금이 다시 예금되며 초과지급준비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지급준비율의 역수**로 계산한다.

법정지급준비율은 $r = 10\% = 0.1$이므로 신용승수는 $m = 1/r = 1/0.1 = 10$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10%를 10이라는 수로 그대로 나누지 말고 소수 0.1로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 100이 은행에 예금되면 10을 준비금으로 남기고 90을 대출한다. 그 90이 재예금되면 다시 81이 대출되는 과정이 이어진다. 총예금은 $100 + 90 + 81 + \cdots = 100/(1 - 0.9) = 1{,}000$이므로 최초 금액의 10배이다.

①의 1, ②의 2, ③의 5는 각각 $1/r$과 일치하지 않는다. 최초 예금 100을 제외한 추가 파생예금은 900이므로 9배가 되지만, 이 문제는 최초 예금을 포함한 총예금의 신용승수 10을 묻는다. 현금 보유나 초과준비금까지 고려하는 일반적인 통화승수와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22. 경찰은행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가 다음과 같다. 만약 법정지급준비율이 10%일 때 경찰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은 얼마인가?

(단위: 원)

차변(자산)		대변(부채)	
지급준비금	1,000,000	예금	8,000,000
대출금	10,000,000	기타 부채	2,000,000
기타 자산	4,000,000	자본금	5,000,000

① −200,000원

② 0원

③ 200,000원

④ 800,000원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예금 8,000,000원에 지급준비율 10%를 적용한 필요준비금은 800,000원이다. 실제 준비금 1,000,000원에서 이를 빼면 **초과지급준비금은 200,000원**이다.

계산 과정

초과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실제로 보유한 지급준비금에서 법정 필요지급준비금을 뺀 금액이다. 표의 단위는 원이며, 실제 지급준비금은 자산 쪽에 표시된 1,000,000원이다.

법정 필요지급준비금은 이 문제에서 **예금 8,000,000원**에 법정지급준비율 10%를 적용하여 구한다.
대출금·기타 자산이나 기타 부채·자본금을 예금에 합하지 않는다.
필요지급준비금=8,000,000×0.10=800,000원

실제 준비금이 필요한 금액보다 많으므로 부족액이 아니라 초과액이 존재한다. 초과지급준비금은 1,000,000 − 800,000 = 200,000원으로,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3. 교환방정식($MV = PY$)이 성립하는 폐쇄경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3%, 통화증가율이 8%, 명목이자율이 10%라고 할 때, 이 경제의 실질경제성장률은? (단, M은 통화량, P는 물가, Y는 실질국민소득, V는 화폐의 유통속도로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5%

② 7%

③ 8%

④ 1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은 통상적인 증가율 근사에서 **통화증가율 − 인플레이션율**이다. 따라서 8% − 3% = 5%이며, 명목이자율은 이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계산 과정

교환방정식 $MV = PY$에서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국민소득이다. 통상적인 증가율 근사를 적용하면 통화증가율과 유통속도 증가율의 합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질경제성장률의 합과 같다. 각 증가율을 m, v, π, g라고 하면 $m + v \approx \pi + g$이다.

유통속도가 일정하므로 **유통속도 증가율은 0**이다. 주어진 통화증가율 8%와 인플레이션율 3%를 대입하면 $g \approx m - \pi = 8\% - 3\% = 5\%$이다. 즉 명목 지출의 증가 중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부분이 실질 생산의 증가에 해당한다.

명목이자율 10%는 이 교환방정식의 실질성장률 계산에 필요하지 않다.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서 구하는 것은 실질이자율의 근삿값이지 실질경제성장률이 아니다.

이 계산은 증가율을 더하고 빼는 근사식에 따른 것이다. 주어진 비율을 이산적인 전년 대비 증가율로 엄밀히 계산하면 $1 + g = \frac{1.08}{1.03}$이므로 g는 약 4.85%이다. 문제의 선택지는 통상적인 증가율 근사를 적용한 5%를 제시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①이다.

NoteBase

문 24. 화폐수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에서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와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활성잔고(active balance)라고 하고,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유휴잔고(idle balance)라고 한다.

②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에서 화폐의 유통속도는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③ 토빈의 자산선택이론에서 투기적 화폐수요는 항상 이자율과 양(+)의 관계임을 설명한다.

④ 보몰의 재고이론에서 화폐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토빈의 자산선택이론은 수익과 위험을 비교하는 분산투자로 화폐 보유를 설명한다. 이자율 상승에는 화폐 대신 채권을 보유하려는 대체효과가 있으므로 화폐수요가 **항상 이자율과 양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화폐수요이론은 결제의 필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자산의 수익·위험 등 서로 다른 동기와 비용을 강조한다. 각 이론에서 안정적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고정된 상수라는 뜻은 아니다.

① O: 케인즈의 구분에서 거래적·예비적 화폐수요는 현재 또는 예상치 못한 지급에 대비한 활성잔고로 설명한다. 투기적 화폐수요는 채권가격·이자율 변화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유휴잔고이다.

② O: 프리드만은 화폐수요를 부와 여러 자산의 기대수익 등에 의해 결정되는 안정적인 함수로 보았다. 특히 항상소득을 중시하여 화폐수요와 유통속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유통속도가 모든 시점에서 일정하거나 어떤 변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③ X: 토빈은 위험회피적인 개인이 안전한 화폐와 위험한 채권을 함께 보유하는 자산선택을 설명한다. 채권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화폐에서 채권으로 이동하려는 대체효과가 있어 화폐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소득효과와 위험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항상 양의 관계'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O: 보몰의 재고이론은 화폐를 인출·전환할 때의 거래비용과 현금 보유에 따른 이자 포기의 비용을 비교한다. 거래 규모인 소득이 증가하면 필요한 평균 현금잔고가 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현금을 덜 보유하고 더 자주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NoteBase

문 25. A국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실질이자율과 국민소득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실질이자율, M^s는 명목화폐공급, M^d는 명목화폐수요, P는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Y = C + I + G$
$C = 200 + 0.5(Y - T)$
$I = 250 - 100r$
$G = 510$
$T = 300$
$M^s = 30,000$
$\frac{M^d}{P} = 2Y - 800r$
$P = 10$

① 균형 실질이자율: 0.2, 균형 국민소득: 1,580
② 균형 실질이자율: 0.4, 균형 국민소득: 1,580
③ 균형 실질이자율: 0.2, 균형 국민소득: 1,850
④ 균형 실질이자율: 0.4, 균형 국민소득: 1,85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생산물시장 균형식은 $Y = 1,620 - 200r$, 화폐시장 균형식은 $Y = 1,500 + 400r$이다. 두 식을 연립하면 **실질이자율 0.2, 국민소득 1,580**을 얻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생산물시장 균형은 $Y = C + I + G$이다. 조세 $T = 300$을 소비함수에 넣으면
$C = 200 + 0.5(Y - 300) = 50 + 0.5Y$이다.

소비·투자·정부지출을 합하면 $Y = 50 + 0.5Y + 250 - 100r + 510$이다. 따라서 $0.5Y = 810 - 100r$, 즉 **IS 관계**는 $Y = 1,620 - 200r$이다.

화폐시장에서는 명목공급을 물가로 나눈 실질공급을 실질수요와 같게 놓는다. 실질화폐공급은 $M^s/P = 30,000/10 = 3,000$이므로 $3,000 = 2Y - 800r$이다. 이를 정리한 **LM 관계**는 $Y = 1,500 + 400r$이다.

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이 되려면 $1,620 - 200r = 1,500 + 400r$이어야 한다. 따라서 $600r = 120$에서 $r = 0.2$, 이를 대입하면 $Y = 1,580$이다. **실질이자율 0.2, 국민소득 1,580**으로 ①과 일치한다.

확인하면 소비는 840, 투자는 230이므로 $840 + 230 + 510 = 1,580$이다. 실질화폐수요도 $2 \times 1,580 - 800 \times 0.2 = 3,000$으로 실질공급과 같다. 이자율은 문제에 제시된 수치 표기 그대로 사용한다.

NoteBase

문 26.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자산의 실질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 부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여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②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가계는 화폐보유를 줄이고 예금을 증가함으로써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③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정부의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경감함으로써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④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환율이 절하되어 순수출이 증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③이다.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대표적 이유는 **부의 효과, 이자율 효과, 순수출 효과**이다. 물가 하락에 따라 정부지출이 자동으로 증가한다는 설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물가가 하락하면 현금처럼 명목금액이 정해진 자산의 구매력이 커진다. 이에 따라 가계의 실질 부가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부의 효과 또는 실질잔고 효과**라고 한다. 모든 종류의 자산가격이 반드시 상승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명목통화량이 일정할 때 물가 하락은 실질통화량을 늘린다. 같은 거래를 위해 필요한 명목화폐가 줄어 가계가 예금이나 채권 등으로 자금을 옮기려 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압력이 생긴다. 낮아진 이자율은 투자지출을 늘리므로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것이 이자율 효과이다.

③ X: 표준적인 총수요 분석에서 정부지출은 재정정책으로 결정되는 외생변수이며, 물가가 하락했다고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자율 하락이 일부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부의 재화·서비스 구입이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물가 하락은 고정된 명목부채의 실질 상환부담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제시한 경로는 총수요곡선 우하향의 일반적인 근거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④ O: 명목환율과 해외 물가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국내 물가 하락은 국내 재화를 해외 재화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만든다. 이는 실질환율의 절하로 표현되며,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순수출이 증가한다. 이러한 순수출 효과도 총수요곡선을 우하향하게 한다.

NoteBase

문 27.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금 경직성 이론

② 가격 경직성 이론

③ 착각 이론

④ 전망 이론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임금·가격의 경직성과 물가에 대한 착각은 예상하지 못한 물가 변화가 단기 생산량을 바꾸는 이유를 설명한다. **전망 이론은 준거점과 손실회피를 중심으로 위험하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선지별 해설

단기 총공급곡선의 우상향은 다른 조건, 특히 기대물가가 주어진 상태에서 실제 물가가 높아질 때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계이다. 각 보기의 O/X는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표준적인 이론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다.

① O: 명목임금이 계약 등으로 단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예상보다 높은 물가는 실질임금을 낮춘다. 기업의 실질 노동비용이 줄어 노동수요와 고용이 늘고 생산량도 증가하므로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

② O: 일부 기업이 가격을 즉시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물가가 예상보다 상승하면, 가격을 고정한 기업의 상대가격은 낮아진다. 그 기업의 제품 수요가 늘어 생산을 확대하는 반응이 단기 총공급의 우상향을 설명한다.

③ O: 생산자가 자신의 판매가격 상승을 일반 물가 상승이 아니라 자기 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착각하면 생산을 늘릴 수 있다. 정보가 불완전하여 전체 물가와 상대가격 변화를 바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X: 전망 이론은 결과를 준거점 대비 이득과 손실로 평가하고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 등을 설명한다. 개인의 위험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행동경제학 이론이지, 임금·가격 경직성이나 물가 착각을 통해 단기 총공급곡선의 우상향을 설명하는 표준 이론은 아니다.

NoteBase

문 28. 다음 중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하에서 경제주체들이 현금 보유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인 구두창 비용과 기업들이 가격을 자주 조정해야 함에 따른 비용인 메뉴 비용이 초래된다.

② 인플레이션하에서 상대가격의 변화폭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에서 왜곡이 발생한다.

③ 인플레이션하에서 조세의 왜곡이 발생한다.

④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은 인플레이션이 사전에 예측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기존 명목계약의 실질가치를 바꾸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뜻밖의 재분배**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그 영향이 동일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하므로 현금 잔액을 줄이고 자금을 더 자주 옮기거나 인출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이것이 구두창 비용이다. 기업이 가격표·메뉴·전산 가격 등을 변경하는 데 드는 자원은 **가격 조정의 메뉴 비용**이다.

② O: 모든 기업이 같은 시점에 같은 폭으로 가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가격 조정 시점과 속도의 차이 때문에 상품 간 상대가격이 변동하면, 소비자는 수요·공급 여건의 변화와 일반 물가 상승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소비 선택과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

③ O: 세제가 물가 변화에 완전히 연동되지 않고 명목소득이나 명목수익에 기초하면 조세 부담이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질 구매력이 그대로인데 명목소득 증가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거나, 물가 상승을 보상하는 명목이자 부분에도 과세되어 실질 세후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④ X: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임금·이자율 등 계약조건에 미리 반영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기존 명목계약의 실질가치를 뜻밖에 바꾼다. 예를 들어 실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고정 명목채무의 실질부담이 줄어 채무자가 유리하고 채권자가 불리해진다. 따라서 **예상 여부에 따라 재분배와 불확실성의 영향이 달라지므로** 두 경우의 부정적 영향이 동일하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29.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00만 명, 실업자는 300만 명이다. A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① 경제활동참가율: 85%, 고용률: 75%

② 경제활동참가율: 85%, 고용률: 83%

③ 경제활동참가율: 90%, 고용률: 75%

④ 경제활동참가율: 90%, 고용률: 83%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1,800만 명이고 취업자는 1,500만 명이다. 두 지표 모두 생산가능인구 2,000만 명을 분모로 사용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90%, 고용률은 75%**이다.

계산 과정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는 $2,000 - 200 = 1,800$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1,800 - 300 = 1,500$만 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 200만 명과 실업자 300만 명은 서로 다른 범주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므로 $\frac{1,800}{2,000} \times 100 = 90\%$이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므로 $\frac{1,500}{2,000} \times 100 = 75\%$이다. 분모를 경제활동인구 1,800만 명으로 쓰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 90%, 고용률 75%**로 ③과 일치한다.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는 지표이므로, 고용률을 단순히 100%에서 실업률을 뺀 값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문 30. 기술진보가 없는 단순한 솔로우(R. Solow) 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에 대해 규모수익체감의 특징을 갖는다.

②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저축률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③ 저축은 1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키므로 저축률을 높이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④ 인구증가율이 상승하면 초기 균제상태와 비교할 때 새로운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은 감소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새 노동자에게도 자본을 제공해야 하므로 **1인당 자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가 늘어난다. 저축률과 기술이 그대로라면 새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낮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기본 솔로우 모형의 총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을 같은 비율로 함께 늘리면 생산량도 그 비율만큼 증가하는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한다. 다른 생산요소를 고정한 채 자본만 늘릴 때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감소한다는 한계생산성 체감과 구별해야 한다.

② X: 단순 솔로우 모형에서 저축률은 가계의 최적화 과정으로 모형 안에서 도출되는 변수가 아니라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일정한 비율**이다. 주어진 저축률, 인구증가율, 감가상각률과 생산함수에 의해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 결정된다.

③ X: 저축률을 높이면 투자가 증가하여 새로운 균제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1인당 자본과 생산이 증가한다. 그러나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므로 자본축적만으로 1인당 생산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할 수는 없다. 기술진보가 없는 새 균제상태에서도 1인당 생산의 성장률은 0이다. 즉 저축률 상승은 장기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지만 지속적인 1인당 성장률을 높이지 않는다. 총생산은 균제상태에서 인구증가율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도 구별한다.

④ O: 1인당 자본을 k, 생산을 f(k), 저축률을 s, 인구증가율을 n, 감가상각률을 δ라고 하면 균제상태 조건은 $sf(k) = (n + \delta)k$이다.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새로 늘어난 노동자에게 자본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투자도 늘어난다. 저축률과 기술 등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기존의 1인당 자본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므로 새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감소한다.

NoteBase

문 31. 무역의존도의 산출식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수출액-수입액)/GDP

② GDP/(수출액-수입액)

③ (수출액+수입액)/GDP

④ GDP/(수출액+수입액)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③이다. 무역의존도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GDP로 나눈 비율**이다. 백분율로 나타낼 때는 이 값에 100을 곱한다.

개념 구분

무역의존도는 경제 규모에 비해 대외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따라서 분자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 분모는 GDP로 두며, 산출식은 (수출액+수입액)/GDP이다. 정답은 ③이다.

수출과 수입을 빼지 않고 더하는 이유는 국내 경제가 해외와 주고받는 거래의 전체 규모를 보려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수출과 수입이 같은 규모로 크면 순수출은 0이어도 대외거래 규모는 클 수 있다.

①의 (수출액-수입액)/GDP는 순수출의 GDP 대비 비율이다. ②는 이 순수출 비율의 역수이며, 순수출이 0이면 식이 정의되지 않는다. 둘 다 무역의존도가 아니다.

④의 GDP/(수출액+수입액)는 올바른 산식의 분자와 분모를 뒤집은 값이다. 백분율로 표시하려면 ③의 비율에 100을 곱하며, 분자와 분모는 같은 기간·통화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

무역액은 총거래액이고 GDP는 부가가치의 합이므로 무역의존도를 국내 생산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부분의 단순한 구성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한 무역의존도가 100%를 넘는 것도 가능하다.

NoteBase

문 32.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의 *IS − LM − BP*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먼델-플레밍 모형은 완전한 자본이동과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한다.

② 통화정책의 효과는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보다 상대적으로 유효하고, 재정정책의 효과는 변동환율제가 고정환율제보다 상대적으로 유효하다.

③ 먼델-플레밍 모형은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 균형인 *IS − LM* 모형을 개방모형으로 확장한 모형이다.

④ 먼델-플레밍 모형은 수요 측면에서 총수요의 결정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완전자본이동을 가정한 기본 모형에서는 **통화정책은 변동환율제, 재정정책은 고정환율제**에서 유효하다.
고정환율을 지키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과 변동환율에서의 순수출 조정이 차이를 만든다.

선지별 해설

먼델-플레밍의 기본 모형은 단기 가격 경직성 아래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수요와 생산을 분석한다.
완전자본이동을 가정하면 국내 이자율은 세계 이자율에 묶이며, 환율제도에 따라 정책의 파급경로가 달라진다.

① O: 기본적인 먼델-플레밍 모형은 소규모 개방경제와 완전자본이동을 가정한다. 세계 이자율을 자국이 바꾸지 못하고, 국내외 수익률 차이에 자본이 민감하게 이동한다. 자본이동이 불완전한 확장 모형도 있지만 이 문항의 비교는 기본 가정에 따른다.

② X: 정책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서술했다. 변동환율제에서 통화확대는 자본유출과 자국통화 가치 하락을 유발하여 순수출·생산을 늘린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가 통화확대를 상쇄한다. 반대로 재정확대는 고정환율제에서 자본유입에 대응한 통화공급 증가로 효과가 강화되지만, 변동환율제에서는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순수출 감소가 효과를 상쇄한다.

③ O: 폐쇄경제의 생산물시장·화폐시장 균형을 다루는 IS-LM 모형에 국제거래와 자본이동을 추가한 개방경제 모형이다. BP는 대외균형 조건을 나타내며, 완전자본이동의 기본 경우 세계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인 형태로 설명된다.

④ O: 이 모형은 주어진 단기 가격 수준에서 지출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재정·통화정책이 수요와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장기적인 생산능력이나 기술 진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성장모형과는 분석 대상이 다르다.

NoteBase

문 33. 헥셔-올린(Heckscher-Ohlin) 모형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① 요소부존도의 상대적 차이

② 규모경제의 상대적 차이

③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차이

④ 기술수준의 상대적 차이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헥셔-올린 모형은 **국가 간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량 차이**에서 비교우위를 설명한다. 각국은 자국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한다.

개념 구분

헥셔-올린 모형은 국가들이 같은 생산기술을 이용하더라도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부존량**이 다르면 비교우위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산업별로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비율이 다르므로,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자본에 비해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재를, 노동에 비해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재를 수출한다. 여기서 풍부함은 단순한 총량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 사이의 **상대적 비율**로 판단한다.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차이는 리카도 모형의 대표적인 무역 원인이다. 기술수준의 차이 역시 기술 격차에 따른 비교우위를 설명하지만, 공통 기술을 가정하는 기본 헥셔-올린 모형의 원인은 아니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 확대에 따른 평균비용 감소를 통해 무역을 설명하는 다른 접근이며, 기본 헥셔-올린 모형은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요소부존도의 상대적 차이**인 ①이다.

NoteBase

문 34.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무역이론은 무엇인가?

어떤 경제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본(또는 노동)이 축적되는 등 요소부존량이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요소부존량이 변하면 재화의 생산량이 변하게 된다. 어떤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해당 요소집약재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요소집약재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① 립진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

② 헥셔-올린 정리(Heckscher-Ohlin theorem)

③ 레온티에프 역설(Leontief paradox)

④ 스톨퍼-사뮤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다른 생산요소의 양과 재화의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한 요소의 증가가 그 요소집약재의 생산을 늘리고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이는 관계는 **립진스키 정리**이다.

공통 해설

요소부존량은 한 경제가 보유한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 양이고, 요소집약재는 다른 재화보다 특정 요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화이다. 립진스키 정리는 두 재화·두 생산요소 모형에서 **재화의 상대가격과 다른 요소의 부존량이 일정**하고, 두 재화의 생산과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이 유지될 때 적용된다. 한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요소집약재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요소집약재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지문은 이처럼 요소부존량 변화가 두 재화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노동의 양은 그대로인데 자본만 증가하면 자본집약재의 생산이 확대된다. 재화의 상대가격이 일정하여 각 산업의 단위 생산에 필요한 요소 투입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본집약재를 더 생산하려면 자본뿐 아니라 노동도 추가로 필요하다. 이 노동이 노동집약재 산업에서 이동하므로 노동집약재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NoteBase

문 35.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과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내 무역은 비교우위를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산업간 무역은 비교우위를 반영한다.

③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작다.

④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국가간 요소부존도의 유사성 정도에 달려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제품차별화는 다양한 제품을 교환하려는 수요를 만들고, 규모의 경제는 특정 제품에 특화하여 큰 시장에 판매할 유인을 만든다. 따라서 두 특성은 산업내 무역의 비중을 줄이기보다 **높이는 요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 문항이 대비하는 기본 무역모형에서 산업내 무역은 같은 산업의 차별화된 제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현상이며, 국가 간 비교우위 차이보다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로 설명한다. 기술과 요소부존도가 비슷한 국가도 서로 다른 자동차 모델 등을 교역할 수 있다. 이는 차별화된 제품의 수평적 산업내 무역에 관한 기본 설명이며, 현실의 모든 산업내 무역에서 비교우위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② O: 산업간 무역은 서로 다른 산업의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다. 국가마다 상대적인 생산비가 다르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비교열위가 있는 산업의 상품을 수입한다. 생산기술이나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이러한 비교우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X: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는 산업내 무역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소비자는 같은 산업 안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원하고, 기업은 특정 제품에 집중하여 더 큰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평균비용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강한 산업에서는 차별화된 제품을 상호 수출입하는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기본적인 설명이다.

④ O: 국가 간 요소부존도가 크게 다르면 요소비율 차이에 따른 비교우위가 뚜렷하여 산업간 무역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다. 반대로 요소부존도가 유사하면 그러한 산업 간 특화의 유인은 작아지고,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산업내 무역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의 비교이며 무역구조가 요소부존도 하나만으로 결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36. 관세(tariff)와 수입 쿼터(import quota)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는 가격규제 방식이고, 수입쿼터는 수량규제 방식이다.

② 관세는 수입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지만, 수입쿼터는 수입량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다.

③ 관세는 가격의 상승폭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수입쿼터는 가격의 상승폭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④ 관세와 달리 수입쿼터의 경우 수입면허를 받은 사람은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게 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③이다. 관세는 가격에, 수입쿼터는 수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단이다. 쿼터 아래에서는 수입량이 제한되어도 **국내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변하므로** 가격 상승폭을 쉽게 확정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관세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통해 수입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고, 수입쿼터는 허용 수입량에 직접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여기서 가격규제라는 말은 관세가 국내가격을 직접 고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이라는 의미이다.

② O: 관세가 정해져 있어도 국내 수요·공급과 해외가격이 달라지면 수입량이 변하므로 정확한 수입량을 사전에 고정할 수 없다. 반면 집행되는 수입쿼터는 허용 수입량의 상한을 직접 정한다. 다만 수요가 약해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실제 수입량이 상한보다 적을 수 있다.

③ X: 설명의 방향이 반대이다. 세계가격이 주어진 소국의 표준 모형에서 수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종량관세는 세계가격에 세액을 더한 국내가격을 형성하므로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수입쿼터 아래의 국내가격은 수요·공급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수입량이 묶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국내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격 상승폭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④ O: 구속력 있는 쿼터로 국내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높아지면 그 차이에서 쿼터 지대가 발생한다. 수입면허를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받은 수입업자는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면허를 경쟁적으로 경매하면 지대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정부 수입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면허 소지자가 언제나 동일한 순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37. 국제수지 조정에 있어서 지출전환정책(expenditure switching policy)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정책

② 환율정책

③ 관세정책

④ 비관세정책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지출전환정책은 국산품과 수입품 사이에서 **지출의 대상을 바꾸는 정책**이다. 정부지출·조세로 총지출 규모를 조절하는 재정정책은 기본 분류에서 지출변경정책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국제수지 조정정책은 총지출의 크기를 바꾸는 지출변경정책과 국산품·외국상품 사이의 지출 구성을 바꾸는 지출전환정책으로 구별한다. 각 보기의 O/X는 지출전환정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① X: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해 국내 총지출을 조절하므로 기본적인 국제수지 조정 분류에서는 지출변경정책이다. 예를 들어 긴축재정으로 소득과 지출이 감소하면 수입 수요도 줄 수 있지만, 이는 주로 지출 총량을 줄이는 경로이다.

② O: 환율정책은 국산품과 외국상품의 상대가격을 바꾸어 지출의 방향을 전환한다.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품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져 국산품 쪽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실제 국제수지 개선의 크기와 시차는 수요 반응 등에 달려 있다.

③ O: 수입관세는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높여 국산품의 상대적 매력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외국상품에 쓰던 지출을 국내 상품으로 돌리는 작용 때문에 지출전환정책으로 분류한다.

④ O: 수입쿼터와 같은 비관세 조치는 수입품의 이용 가능성이나 비용을 바꾸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대체재로 지출을 이동시킬 수 있다. 총지출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상품 간 지출 구성을 바꾸는 경로에 초점을 둔다.

NoteBase

문 38. 외부충격 및 교란에 따른 환율의 단기적인 반응이 환율의 장기적인 반응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환율의 스필오버(spillover of exchange rate)
② 환율의 오버슈팅(overshooting of exchange rate)
③ 환율의 언더슈팅(undershooting of exchange rate)
④ 환율의 캐리오버(carry-over of exchange rate)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환율이 충격 직후 **새로운 장기균형을 넘어 과도하게 움직였다가** 점차 장기균형으로 조정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금융시장과 재화시장의 조정속도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개념 구분

환율의 **오버슈팅**은 충격 직후의 환율 변화가 장기적으로 정착할 변화 폭을 넘어서는 현상이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환율이 새로운 장기균형 쪽으로 되돌아오는 조정이 나타난다. 단순히 환율이 크게 움직였다는 것보다, 단기 반응을 장기 반응과 비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설명에서는 금융시장의 환율은 빠르게 조정되는 반면 재화시장의 물가는 천천히 조정된다. 이러한 **조정속도의 차이** 때문에 단기에 환율이 장기균형 수준을 지나쳐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국통화 표시 외화가격이 장기적으로 10% 오를 충격에 직후에는 15% 올랐다가 점차 10% 상승 수준에 가까워지는 경우이다.

언더슈팅은 단기 반응이 장기 반응보다 작은 경우로, 문제의 설명과 반대이다.

스필오버는 한 시장이나 국가의 충격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파급효과를 가리킨다.

캐리오버는 효과가 다음 시기로 이월되는 의미이며, 장기 반응을 넘어서는 단기 환율 변동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문제의 현상은 ② **환율의 오버슈팅**이다.

NoteBase

문 39.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환율은 국내상품과 외국상품간의 교환비율인 상대가격을 말한다.

②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에 외국물가를 곱한 후 국내물가로 나눈 값이다.

③ 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1이 된다.

④ 두 국가의 물가를 정의할 때 적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바스켓은 모두 동일하고 가중치의 차이가 없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각국 물가지수의 재화·서비스 바스켓과 가중치는 **소비구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절대적 구매력평가를 설명할 때 동일한 바스켓을 비교한다는 가정과 실제 각국의 물가지수 작성 방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실질환율은 통화 자체의 교환비율인 명목환율과 달리 국내상품과 외국상품의 상대가격을 나타낸다. 두 나라의 상품가격을 같은 통화로 환산하여 비교한 것으로, 상품 간 실질적인 교환비율을 뜻한다.

② O: 외국통화 1단위의 국내통화 가격을 명목환율 E, 국내물가를 P, 외국물가를 P^*라 하면 $q = \frac{EP^*}{P}$이다. 외국상품 가격을 E로 곱해 국내통화로 환산한 뒤 국내상품 가격으로 나눈다. **명목환율의 표시방식**을 반대로 정의하면 식도 그에 맞게 바뀐다.

③ O: 동일한 상품 바스켓을 비교하는 절대적 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P = EP^*$이므로 $q = 1$이다. 이는 두 바스켓의 가격이 같은 통화로 환산했을 때 같다는 의미이다. 다만 물가상승률 차이와 환율변화율의 관계만 나타내는 상대적 구매력평가는 실질환율 수준이 반드시 1이라는 뜻은 아니다.

④ X: 실제 국가별 물가지수는 소비구조와 통계 작성 방식에 따라 **구성 품목이나 가중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모든 국가가 같은 재화·서비스 바스켓과 같은 가중치를 사용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 차이는 물가지수로 계산한 실질환율과 구매력평가를 비교할 때 고려해야 하므로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40. 통화동맹(currency union)의 장점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비용의 경감

② 화폐주조차익의 상실

③ 국제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

④ 경제적 효율성 증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②이다. **화폐주조차익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통화동맹의 비용·제약이지 장점이 아니다. 환전 비용 감소와 무역·투자 촉진 등은 대표적인 편익이다.

선지별 해설

① 장점이다. 공동통화를 사용하면 회원국 사이의 거래에서 환전 수수료와 통화 교환에 드는 시간·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역내 통화 간 환율위험에 대응하는 비용도 감소한다.

② 장점이 아니다. 화폐주조차익은 통화 발행을 통해 발행 주체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다. 개별 국가가 독자적인 통화 발행 권한을 포기하면서 이 이익을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편익이 아니라 비용 또는 제약**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다만 통화동맹의 제도에 따라 공동 중앙은행의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으므로 회원국의 관련 수익이 반드시 전부 사라진다는 뜻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③ 장점이다. 역내 환율변동 위험과 환전 비용이 줄어들면 기업은 국경 간 거래와 투자의 수익성을 더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국제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장점이다. 공통된 통화 단위로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가격 투명성과 경쟁이 높아지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다. 다만 비대칭적 충격에 대한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대응이 제한되는 등 비용도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순편익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